

「100인 복지포럼」 국민이 바라는 복지

세미나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식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 회 식
	국민의례
	개 회 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 사: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인 사 말: 심규선 (동아일보 편집국장)
[Session 1] 주제발표	
	좌 장: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표
14:00~15:00	■ 동아일보 복지 체감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정위용, 동아일보 교육복지부 차장) ■ 평생맞춤복지를 위한 정책과제 (안종범, 제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맥을 짚는다 (김용익, 제19대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15:00~15:10	휴 식
[Session 2] 토 론	
15:10~16:00	안종범 (제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김용익 (제19대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16:00~16:10	휴 식
16:10~17:00	종합토론
17:00	폐 회

주제발표

- ☐ 동아일보 복지 체감도 여론조사 결과(별지) 1

정위용 | 동아일보 교육복지부 차장

- ☐ 평생맞춤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 3

안종범 |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 ☐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맥을 짚는다 31

김용익 |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동아일보 복지 체감도 여론조사 결과

정위용 (동아일보 교육복지부 차장)

(자료 별도 배포)

평생맞춤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

안종범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I. 서론	5
II. 복지 환경과 복지 정책의 변화 과정	8
1. 복지환경의 변화	8
2.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의 변화	13
III. 평생맞춤복지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17
1. 복지국가유형과 시사점	17
2. 평생맞춤복지	18
3.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20
4.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행복 5대 약속	23
IV. 복지재정과 복지정책의 개선과제	24
1. 복지재정의 원칙과 방향	24
2. 복지정책 실효성 증대 및 개선과제	26
3. 사회보장기본법 후속조치	27
V. 결론	28

평생맞춤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

안종범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I. 서론

□ 복지정책의 변화과정

-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실효성과 만족도를 되돌아볼 틈도 없이 꾸준히 확장 위주의 변화를 거듭해왔음.
 - 60~70년대에는 선성장·후분배(복지) 기조를 바탕으로 분배와 복지가 뒷전 이었던 것이 사실
 - 80년대 민주화 이후 복지확장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도입과 꾸준한 복지재정 소요가 증가
-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지극히 낮은 상황임.
- 복지재정의 추가적인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복지만족도가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프로그램과 전달체계의 문제
-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하였거나 현재 실행중인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대부분 도입해서 시행해 본 결과, 투입되는 재정대비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는 실정
 - 제대로 된 검증과 평가를 거치지 않고, 또다시 외국의 사례만을 들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반복하고 있음.
 -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시도하기는커녕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존의 복지지출을 추가로 더 늘리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계속된 현금지급방식의 지원은 새로운 수급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탈수급은 저해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 특히,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결하여 진정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복지 환경의 변화

- 저출산의 증거로 OECD 국가평균 합계출산율을 크게 하회하는 1.23명, 여성의 초혼, 초산연령 증가 속도가 계속 증가하여 28.9세, 30.25세로 나타남.
- 유래 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40년도 지나지 않아 세계 최고령국의 노인인구 비중 38.2%에 도달할 전망
- 무엇보다 큰 불확실성인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국가채무(422.7조원, GDP 대비 33.3%) 및 재정수지의 규모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조속한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요한 시기

□ 이념과 유형에 집착하는 복지정책

- 계속된 이념논쟁과 유형구분에 따른 비효율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구형 vs 대륙형 등의 논쟁은 현장에서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복지

□ 우리만의 복지, 국민이 원하는 복지 실현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검증된 복지제도를 선보여야 함.
 - 획일적인 이분법적 구분에 국민이 잠시 솔깃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부담 수준과 복지수혜수준을 탐색해야 할 것임.
- 부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면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

□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한국형복지모형은 평생맞춤복지

- 한 순간이 아닌 평생 동안, 필요한 때에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 － 여·야, 이념, 지역, 그리고 소득계층 등의 아무런 구분도 존재하지 않음.
 - － 국민만을 생각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함.

□ 본 발제문에서는,

-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의 길을 걸어왔고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며, 우리 복지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봄.
- 다음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부담해서 얼마나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미래의 복지인지 논의하고, 이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함.

II. 복지 환경과 복지 정책의 변화 과정

1. 복지환경의 변화

가. 저출산·고령화·통일

□ 저출산 현상 고착화

- 1960년대 6.0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0년 1.23명으로 0.08명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는 1세기 이상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유래 없이 급속히 진행

<표 7>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OECD 평균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우리나라	4.53	2.83	1.59	1.47	1.08	1.12	1.25	1.19	1.15	1.23
OECD평균	2.71	2.14	1.86	1.64	1.62	1.65	1.68	1.71	1.74	-

자료: 통계청

- 여성의 초혼연령은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을 기준으로 과거 7년간 0.9년 증가한데 비해 이후 7년간은 1.8년으로 증가속도가 2배인 것으로 나타남.
 - － 그 이후에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표 8> 우리나라 초혼연령 추이

(단위: 세)

구 분	1990	1995	1997	2000	2004	2005	2007	2009	2010
남	27.9	28.4	28.6	29.3	30.6	30.9	31.1	31.6	31.8
여	24.8	25.4	25.7	26.5	27.5	27.7	28.1	28.7	28.9

자료: 한국인구학회

- 초산 연령은 30.25세로 전년(30.1세)보다 0.15세 증가
 - － 전년 초산 평균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데 이어 올해도 30대 이상이며, 초혼 연령 상승으로 초산 연령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표 9> 우리나라 초산연령 추이

(단위: 세)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초산 연령	29.27	29.42	29.60	29.85	30.10	30.25

자료: 통계청

- 출산율 저하는 노동력 감소, 노인인구(비중)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유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
- 출산력 저하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한국사회의 경우에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인구구조의 고령화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율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또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 － 우리나라는 2010년 노인인구의 비중이 10.3%로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에 초고령사회(20%), 2050년 세계 최고령국(38.2%)에 진입할 전망
- 문형표(2008)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규모가 2008년 GDP 대비 4.0%에서 2030년 11.8%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 － 보다 큰 문제는 사회보장지출의 막대한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그 지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
- 독거노인의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
 - － 독거노인 가구비중은 1996년 16.3%에서 2000년 19.7%, 2006년 23.5%로 증가
 - － 독거노인 증가와 취약한 공적연금이 맞물리면서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45.1%, OECD 평균 13.5%의 3배)
 -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 일본의 2배 : 일본은 6년(82세~76세)인데 반해 한국은 12년(79세~67세)

-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가 주목받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제반 현황 및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

□ 통일로 인한 복지환경 변화

- 경제·사회·재정 부문에 있어 최고의 불확실성은 통일과 관련되었으며, 복지 부문은 더욱 크게 고려해야 할 문제
 - － 재원조성과 지출간의 시차, 그리고 재원부담주체와 수익자가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
 - － 통일의 시기와 방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재원조달 대책 마련과 사전제도정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재원소요 사전 축소가 가능
- 통일준비는 사전제도 정비가 중요
 - －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의 반은 복지비용, 그 중의 반은 연금지출이 차지
 - － 독일방식으로 연금을 통합할 경우 현행 연금체계는 막대한 통일 비용 초래 가능성 높음
 - － 따라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금체계로의 재정비하고, 연금지출에 방어적 기능을 하는 취업지원 등 서비스 확대 등 사전제도정비가 필요

나. 글로벌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 유럽 재정위기(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5호 참고)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PIIGS 5개국(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의 재정상황이 악화
 - － 2010년 5월 및 11월에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IMF/EU에 구제금융을 신청
- 2010년 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수치도 더욱 악화되었음
 - － 유럽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6.3%, 정부부채는 84.1%로 증가할 전망
- 그리스 및 아일랜드의 재정위기가 다른 국가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불안감을 안고 있으며, 국가채무 관련 위험이 증가

□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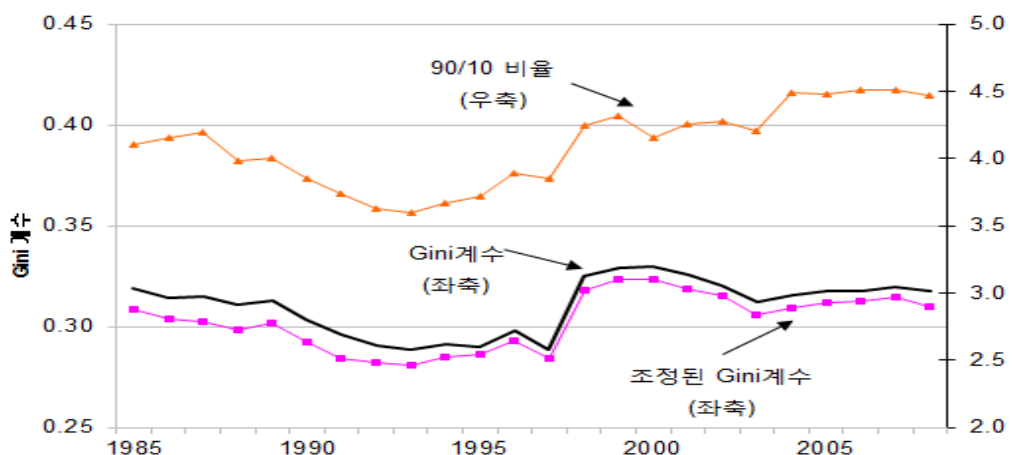
- 이영(2011)은 사례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국가채무 수준 기준)이 훼손된 국가들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사례적 증거를 발견
 - －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채무 수준인 독일과 북구 유럽국가들은 2000년 초반과 1990년대 초반 각각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복지지출을 낮추고 성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킨 국가임을 보임.
 - － 한국은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공기업 부채 등을 고려하면 발표 수치보다 양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다. 분배구조악화

□ 소득불평등 지수의 악화

- 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살펴본 우리나라 분배구조는 장기적으로 1990년 초반까지 개선, 이후 악화 추세
 -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의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 전망
 - － 상·하위 10%의 소득 분위배율인 90/10 배율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까지 Gini계수와 유사한 양상이었으나, 이후 상·하위 10%가구 소득격차가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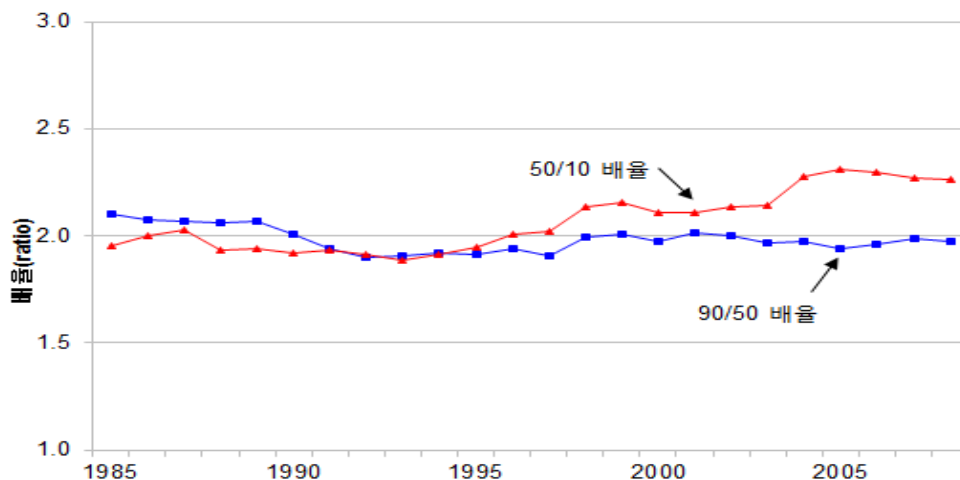
[그림 2] 소득불평등 추이: Gini계수, 조정된 Gini계수, 90/10 배율



주: An and Bosworth(2012)에서 재인용

- 반면에 90/50 배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이후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추이
 - － 50/10 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증대되는 양상인데 이는 최저 소득분위의 소득 감소가 중위 소득분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와 중위(50%) 소득 가구의 상대 소득격차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반면 상위 10%와 하위 10% 소득가구의 격차는 크게 증대

[그림 3] 소득불평등 추이: 50/10 배율 및 90/50 배율



주: An and Bosworth(2012)에서 재인용

-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An and Bosworth, 2012).
 - － 중위 소득의 50%를 빈곤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에도 한국은 2000년대 중반 15% 수준인데 비해 OECD 국가의 평균은 11% 수준
 - － 한국의 경우 대만 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저 소득분위와 최고 소득분위의 격차를 비교한 90/10 배율이 큰 차이
 - － 또한 가구의 유형과 무관하게 한국의 경우 대만에 비해 높은 빈곤수준
 - － 반면, 미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소득불평등 및 상대적 빈곤 수준이 양호

2.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의 변화

가. 한국 복지의 역사와 경제발전과정

□ 70년 이전은 사회복지제도의 태동기

- 초기 사회복지제도의 시작은 빈민구제 및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 부조의 성격으로 시작
- 본격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법규정 도입은 제3공화국 초기(1961~1971)

□ 복지제도의 확장기(1972~1987년)

- (의료보험)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 보호사업도 동시 실시
- (국민연금)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통하여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

□ 복지제도의 발전기(1988~1997년)

-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및 국민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그간 실시되어 온 사회 보험 및 공공부조제도의 안착 및 적극적인 형태의 복지제도 도입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 복지제도의 정립기(1998년~)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대체
- 전국민 연금의 실현(1999),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적용 확대(1998.10), 노인장기 요양보험 도입(2008.7), 기초노령연금(2007) 및 장애인연금(2009) 실시 등

나. 복지재정의 추이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복지재정지출 규모의 뚜렷한 증대

- 이와 같은 복지 재정지출규모의 증대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도입 등의 사회보장 및 복지 확대정책의 결과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12년 복지재정 지출은 연평균 8.0%로 확대(총재정규모는 6.1%)

다. 재정과 복지정책의 문제점

□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 박형수 외(2009)는 현행제도 하에서 복지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2010년 9%에서 2050년 20.2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안종범, 안상훈, 전승훈(2010)은 현행제도 하에서 복지지출이 연평균 8.06% 증가할 경우, 2050년 통합재정 기준으로 29.7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표 10> 우리나라 복지지출 추이

구 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통합재정	일반정부	SOCX	SOCX (지방비 포함)		
2010	7.35	9.8	8.3	8.85	20.05	26.42
2020	7.99	11.76	10.48	11.04	20.2	27.38
2030	10.95	15.77	14.35	14.91	25.11	33.29
2040	17.28	24.28	22.09	22.65	31.08	40.13
2050	29.73	41.07	37.14	37.7	38.52	48.37

□ 실태파악 부실 및 정책 실효성 평가 부재

-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부재로 인한 정책수단의 한계가 드러남
 - － 통계청은 분배상황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빈곤통계는 연1회 발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 없이 단순한 반복 및 확대만 시도
 - －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곤이 심화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이나 실질적 대책은 거의 내놓고 있지 못함.
 - － 예를 들어, 저출산 정책의 경우 과학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였고, 결국 출산율 제고 성과는 없음.

□ 정책의 목적과 대상의 불명확성

- 정부는 복지가 단순히 충분한 현금지급으로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
 - － 복지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과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빈곤이 계속 악화
- 결국 2006~07년 빈곤탈출 확률은 31.8%에서 2008~09년 20.9%로 떨어지고, 비빈곤층의 빈곤층 진입 확률은 동 기간 동안 4.5%에서 5.8%로 증가
- 취업빈곤자의 64.6%가 취업인 상태에서도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지 못해 지속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 (김혜련, 2009)

□ 부처별, 정책별 중복성과 비효율성

- 현재 우선순위, 자원조달, 전달체계 등에 대한 종합 계획이 부재
 - －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교육부 등의 부처들이 도입·확대하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들을 소화해서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상호연계체제가 부재

- 무상급식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녀의 낙인효과(stigma effect)문제도 교육부가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 기초법에 의한 급여 외에 9개 부처에서 32개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부가지원
 - 수급층과 차상위층의 소득역전 현상이 초래,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소득 77만원이고 차상위층 61만원인 상황이 발생
 - 이는 수급자 진입 촉진 및 탈수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

III. 평생맞춤복지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1. 복지국가유형과 시사점

□ 주요국별 복지국가유형

- 역사적으로 복지국가 유형은 한 국가가 하나의 유형으로만 지속되지는 않음.
 - －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에 조응하고 복지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진화·발전
 - － 진화·발전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 국민적 정서, 사회경제적 구조 등이 변화의 경로상 특징을 결정
 - － 사회지출의 규모 비교해보면, 스웨덴(사민주의) > 프랑스(보수주의 or 대륙형) > 영국(자유주의 or 베버리지모델) > 미국(자유주의) ≥ 일본(자유주의)
- 복지지출의 확대나 축소는 복지국가의 유형 혹은 성격과 깊은 관련성
 - － 보편주의 복지는 국가의 복지확대가 대부분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은 잔여주의 복지모델에 비해 덜하다는 특징
 - － 선별적 복지 또는 잔여주의 복지는 극소수의 빈곤층에게는 경제발달의 성과가 특별하게 부가되지도 않으면서 경제침체에 특별히 감액되지 않음.

□ 시사점

- 복지국가의 확립기에 있을 때 선진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복지수요를 잘 예측하여 복지모델을 설계
 - － 재정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설계할 필요
- 경제성장에 따른 물적토대가 뒷받침된 복지국가는 성장세가 중단되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복지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을 착안할 필요
 - － 복지지출은 경기침체에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확대되거나 감소 하더라도 그 폭에 제약이 따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정균형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

- 복지지출의 재원이 기여와 급여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회보험료 중심으로 마련되는지, 아니면 조세를 중심으로 마련되는지에 따라 경기변동에 복지재정이 반응하는 양태가 달라질 수 있음.

<표 11> 복지재정 부담과 복지지출수준

유형	성공여부	내용	해당국가
고부담-고복지	성공	· 재정건전성 유지 · 성장기반유지 · 국민만족과 사회안정	스웨덴, 독일, 덴마크(golden triangle)
	실패	· 재정악화 · 저성장구조 고착화 · 국민불만증대와 사회불안	이태리
저부담-저복지	성공	· 재정건전성유지 · 성장기반유지 · 지속성장에 의한 분배구조개선	미국(?), 한국(현재까지)
	실패	· 분배구조 개선실패 · 저성장구조고착 · 재정악화	일본
저부담-고복지	성공	· 지속불가능 · 장기적으로 재정위기와 경제위기 불가피	-
	실패	· 재정위기와 경제위기 · 국민불만증대와 사회불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고부담-저복지	성공	사례 없음	
	실패		

주: 안중범(2011a)

2. 평생맞춤복지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비전 재정립의 필요성

- 자본주의황금기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탈산업화, 국제적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한국은 고도성장기 종언, 일자리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국민들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 생애단계별로 고른 기회가 주어지고 제도전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필요

□ 탈이념 국민중심·현장중심·수요자중심 복지

- 복지기조를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무의미한 이념대립과 정치적 논쟁에서 탈피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중심·현장중심 복지가 필요
 - － 특정 복지국가모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환경변화에 걸맞은 한국형 복지국가모형을 모색할 필요
 -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보편과 선별이 필요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함.
 - － 질 낮은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품질 높은 서비스를 꼭 필요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모든 국민에게 생애단계별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

-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생애단계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
 - － 누구나 필요한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보건·의료, 주거, 노후생활 등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평생 복지’
 - － 보편적 복지영역에 대한 국민 기본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 복지’
 - －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선제적·예방적 복지’

□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 추진: 사각지대 없는 책임복지

-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통합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책임복지 추진
 - －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적 전환을 통해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성장과의 선순환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
 - － 복지정책의 추진·운영체계를 재정비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달체계를 촘촘하게 바로잡아 사각지대 및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3.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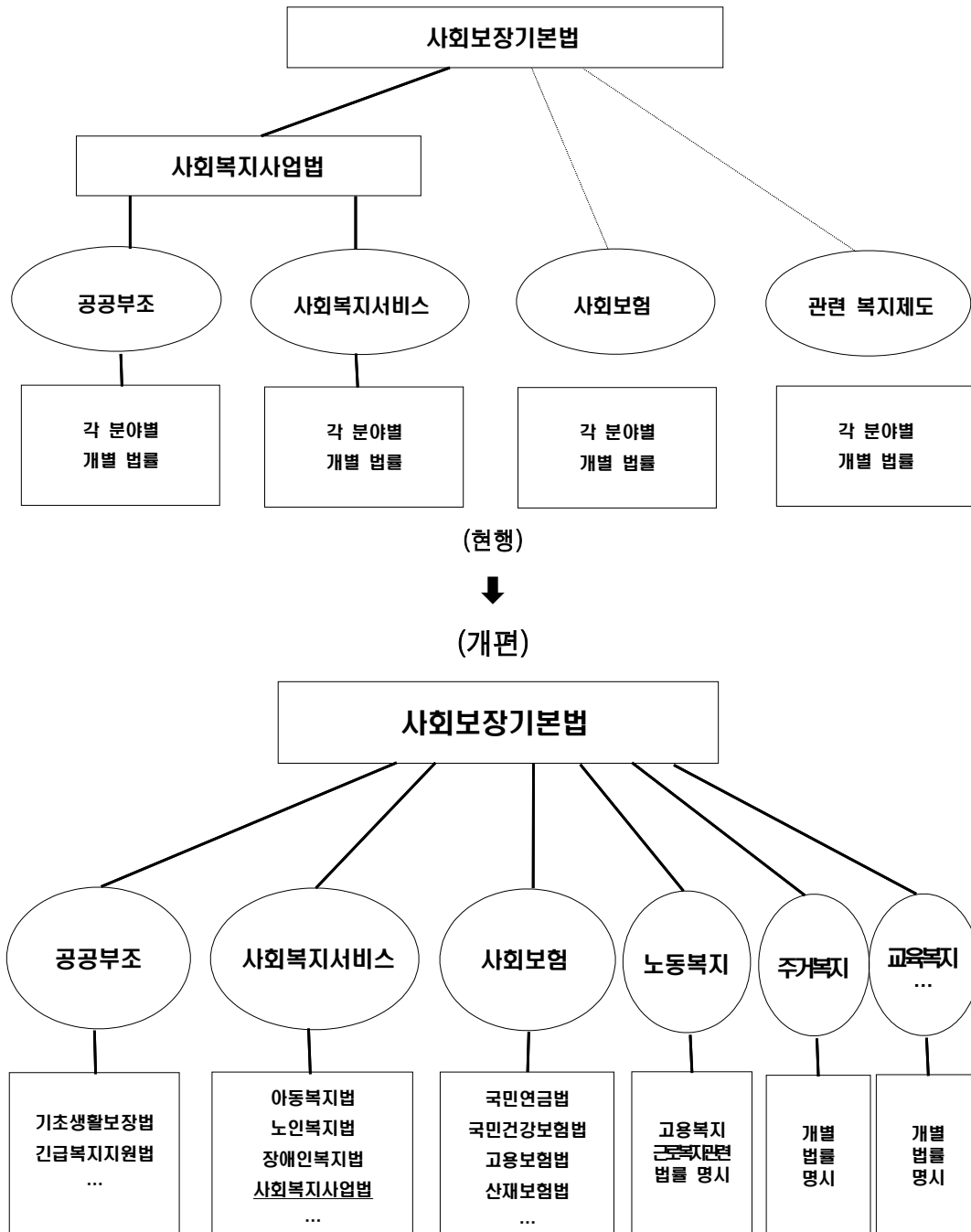
□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과거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초한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
 - 현금급여중심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던 선진국들이 최근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짐.
-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들의 성공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이므로 유연하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이 가능
 - 현 시점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 지속가능한 선진형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이 가능

□ 부처간에 흩어져 있어 중복·누락되는 사회보장정책들의 통합·조정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법률과 정책들은 여러 부처에 산재한 상태
 - 이런 부처간 칸막이는 정책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결국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복지정책들을 통합·조정함으로써 복지만족도와 복지실효성을 증대함.

<그림 3>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 체계 개편 개요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주요내용

- 4개장 35개 조항의 현행 기본법을 전부개정안은 7개장 41조항으로 확대

<표 13>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개정내용과 개선효과

	현행 (4장 35조)	개정안 (7장 41조)	개선효과
1. 복지패러다임	· 소득보장중심 복지 · 사후적 복지 ·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복지	· 소득+서비스 균형 · 선제적·예방적 복지 · 수요자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국민들의 복지만족도 극대화 · 복지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 제고
2.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 중앙·지방·정부부처 간의 분절적 계획수립 · 관련 발전계획간 연계결여	· 사회보장기본법상 계획이 기초가 되어 모든 복지 계획 통합 관리	· 정책 연계성 및 연속성 보장 · 정책 일관성유지로 국민신뢰 확보
3. 복지정책의 조율	·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사각·중복 발생	· 복지정책의 사전조율 의무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부처 간 조정가능	·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사각 지대 해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4. 복지전달체계	· 전달체계의 갈때기현상, 사회보장정보 사후관리 부재로 재정누수	· 정책 사전조율 의무화, 통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갈때기 현상 제거로 정책 효과와 복지만족도 제고

□ 기대효과

- 현금중심에서 사회서비스와의 균형에 의한 중장기 재원 확충
 - 현금중심의 경우 소외탈출 가능성이 낮아서 지속적 재원소요 가능
 - 사회서비스를 활용 소외탈출의 동력과 유인으로 작용해 재원 소요 감소
 - 사회서비스 확충 자체가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창출
-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중복 및 낭비 근본원인 해결
- 전달체계 획기적 개선에 의한 실효성 증대

4.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행복 5대 약속

가. 새누리당의 ‘국민과의 약속’

- 새로운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 명칭개정 자체가 쇄신
 - 전문, 정책의 구조는 유지, 단순 나열된 정책부분을 주제별로 그룹을 구성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그리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씀.
 - 국민과의 약속 재배열로 우선순위 부여: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

나. 가족행복 5대 약속

- 함께 미래로 : 가족행복이 국민행복
 - 모든 세대를 아울러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 담아 “가족행복 5대 약속”
 - － 다섯 가지 약속은 국회개원 100일 이내에 입법발의를 통해 반드시 지킬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표 14> 가족행복 5대 약속

할머니·할아버지	○ 건강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확대와 돌봄서비스 확대
엄마·아빠	○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 주거비 부담 덜기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딸·아들	○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스펙타파 취업) - 열정과 잠재력으로만 평가받는 스펙타파 취업시스템
	○ 보육에 관한 국가완전 책임제 만 0~5세까지 양육수당·보육료 전계층 지원

IV. 복지재정과 복지정책의 개선과제

1. 복지재정의 원칙과 방향

□ 재원조달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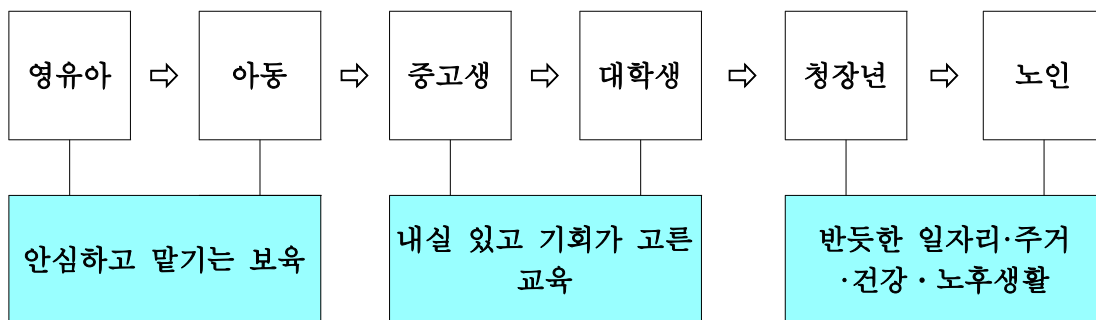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불안정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
-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달체계를 개혁하여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를 높여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극대화
-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 조달하며, 탈세를 막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

□ 추진전략

- 복지 누수와 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 － 현금중심에서 사회서비스와의 균형에 의한 중장기 재원확충
 - 현금중심의 경우 소외탈출가능성 낮아서 지속적 재원소요
 - 사회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소외탈출의 동력과 유인으로 작용해서 재원소요 감소
 - 사회서비스 확충 자체가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창출
 - － 부처간 칸막이 없어짐에 따라 중복 및 낭비 근본원인 해결
 - － 전달체계 획기적 개선에 의한 실효성 증대
- 효과가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SOC 투자 등 여타 부문의 예산을 줄여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
-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마련
 - － 세원 양성화, 비과세 감면의 축소, 세금 징수율개선과 체납축소 및 조세체계 개혁을 추진
 - 조세체계의 단순화, 신고철자 및 서식의 간소화를 통해 조세저항과 행정비용 (징수비용+납세협력비용) 축소를 통한 세원확충

□ 복지전략과 정책방향

- 새로운 복지비전의 전략적 원칙에 입각, 생애단계별 복지정책 맞춤형으로 제시
 - － 1단계: 육아종합정책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 － 2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 (내실 있고 기회가 고른 교육)
 - － 3단계: 일자리와 주거 보장
 - － 4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



- 보육과 교육
 - － 전국민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복지수요라는 점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되 꼭 필요한 계층부터 내실있게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 노후소득보장-고용안정-산재보호-의료보장-장기요양보장을 위한 5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
 - － 이러한 사각지대를 두고 복지의 보편주의를 논하는 것은 허구인만큼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2. 복지정책 실효성 증대 및 개선과제

가. 복지-노동-교육의 연계

□ 복지정책의 방향

- 그동안 복지정책은 소외계층들에게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복지(welfare)에서 탈피하여, 소외탈출의 기본 동력 제공을 위한 일하는 복지(workfare), 그리고 보다 나은, 오래가는 일자리를 보장을 위한 학습복지(learnfare)로 발전

□ 고용과 복지

- 고용은 예산과 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관련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
 -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

나. 복지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평가체제의 확립

-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복지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제도가 도입 및 확대
- 복지제도의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복지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
 - － 복지내실화를 위한 복지-노동-교육 등을 중심으로 정책혼합(policy-mix)이 보다 광범위하게 시도될 경우, 이러한 평가체제의 확립은 중요한 역할
 - － 사후평가는 「사전적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사업 사후평가 → 추후 정책 및 예산편성에 반영」이라는 예산과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함.

3. 사회보장기본법 후속조치

□ 추진방향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효율적 실시(2013년 1월)를 위한 관련 개별법 개정과 시행령 준비
- 개정법에 신규 도입되는 제도 추진방향과 업무 수행방안 마련
 - － 사전협의·조정,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 평생맞춤복지 제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강화
 - － 전국 230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를 통한 상담·사례관리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서비스 내실화
- 정보시스템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 지자체 복지사업 및 민간 자원 DB화를 통한 자원관리 정보화

□ 사회보장 통계작성·관리

- 사회보장 관련 통계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되어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된 통계를 포함(지자체 포함)
- 재정추계 결과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V. 결 론

□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의 제시

- 지속된 복지제도의 무분별한 확장과 현금지급방식의 고수로 인해 정책 사각 지대를 양산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않는 고질적 문제 지속
 - －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들이 존재하나 필요한 곳에 혜택이 지원되는 않는 시스템
 - － 국민은 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둘다 만족하지 못하는 복지정책 제도
- 미시적인 제도의 수정보다는 복지정책의 큰 틀을 재정립해야하는 시기
 - －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 필요
 - －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을 세워야 할 시점 :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합한 복지제도를 구상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구현

□ 복지생태계의 화합을 통한 국민행복 달성

-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선순환 모형 추구를 위해 복지 생태계의 대화합이 선행
 - － 복지 학계, 정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 각자의 영역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큰 틀을 정비하는데 의견을 함께하여 나아갈 필요
- 분명한 역할 정립을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
 - － (학계) 국민중심의 복지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국책연구원 외 다양한 공공 정책 평가 기관을 설립이 필요
 - － (언론) 정부와 국회보다는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 중심의 취재 발굴 및 재원 소요, 재원조달, 실효성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정책 검증
 - － (정부) 정책 부서에 따른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일개 부처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큰 주제 아래에서 공조와 협조체제 구축

○ 탈이념 국민중심·현장중심·수요자중심 복지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 vs 경제 등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국민, 즉 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복지가 필요

□ 평생맞춤 복지비전

○ 모든 국민에게 생애단계별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애단계별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
- '평생 복지', '맞춤 복지', '선제적·예방적 복지'를 실현

○ '국민중심', '현장중심', '미래지향'적 복지국가로서의 발돋움

- 통합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책임복지 추진
-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적 전환을 통해 성장과의 선순환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

☞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되어 현장중심으로 시행되고 현장에서 평가되는 것으로 현장중심 국민눈높이 정책이 중요

참고문헌

- 고영선(2011),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01
- 김혜원, 김은경, 전승훈(2007),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련(2009), 『근로빈곤의 동태적 분석』, 통계개발원
- 문형표(2008),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박형수, 전병목(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안상훈 외(2007), 『지속가능한 한국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보건복지가족부
- 안종범 (2011a), 「한국형 복지모형과 복지재정」,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 (2011b), 『복지재정 확립과 복지정책 개혁』,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 안종범, 안상훈, 전승훈(2010),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윤희숙, 고영선(2011),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 이승욱(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 연구』, 통계청
- 이영(2011),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pp.77-108
- 통계청, 201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11), 『재정동향』 제5호
- An, C. and B. Bosworth(2012),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 Analysis of Trends, Causes and Answers*, Harvard Univ. Press. 2012, forthcoming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맥을 짚는다

김용익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I. 서론	33
II. 복지는 왜 필요한가?	34
III.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가?	38
IV. 복지의 장애요인	42
V. 맺는 말	44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맥을 짚는다

김용익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I. 서론

□ 복지에 대한 토론의 '동어반복'

복지국가 담론이 대두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문제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토론과 언론의 각종 기획시리즈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어 여·야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고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분석과 평가도 많았으며 대선을 앞두고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앞선 대다수의 토론들은 엇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복지에 대한 토론은 일종의 '동어반복'에 빠져 있는 느낌이다.

이 토론회에 가능한 한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발표자는 복지문제를 약간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복지국가로 만든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에는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이 전제되어 있으나 상당 부분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은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미 대부분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변화, 발전할 수 있으며 발표자 역시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발표의 논지를 간략히 요약 정리를 한 것이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 문헌인용 등은 가급적 생략하고자 한다.

□ 공약과 국정운영계획

이 토론회는 양당의 복지정책 비교를 목적으로 한 듯하다. 이러한 비교는 이번 총선 기간 중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며 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된 것은 ‘공약’이다. 그러나 공약은 선거에서 대국민 소구력을 가져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선별하여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구상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보다는 줄었겠지만 지키지 못할 공약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약은 물론이고, 그 공약의 바탕이 되는 각 정당의 집권 전 정책구상도 집권 후 실제 국정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당의 정책적 차이는 ‘집권 후 국정운영계획’을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물론 각 정당이 국정운영계획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단계도 아니고, 만약 있다고 한들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가급적 공약보다는 (개인적 의견이라도) 국정운영 계획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자 한다.

II. 복지는 왜 필요한가?

□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세계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아마 누구라도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진행 속도의 완급이 있었을 뿐이다. 고령화는 2020년경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달함에 따라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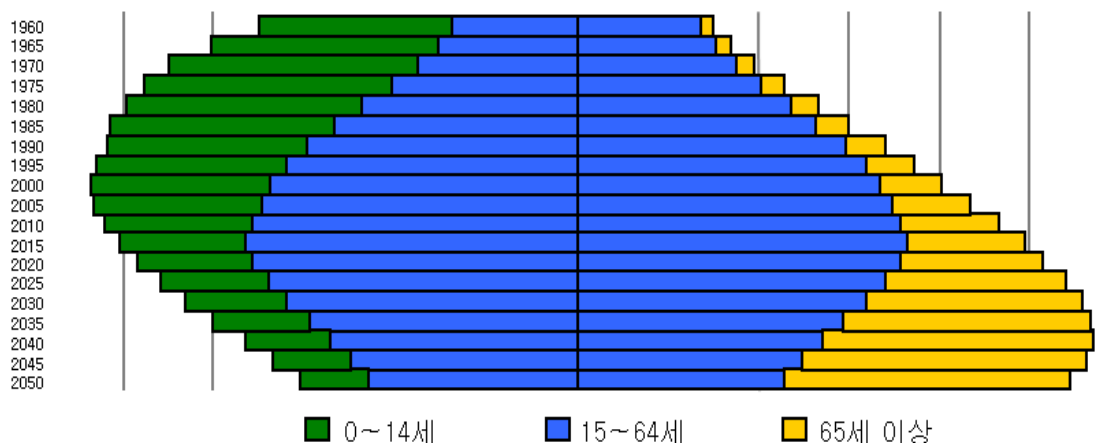
그러나 양극화의 정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소득’의 양극화를 지표로 보아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자산의 양극화는

훨씬 심하고¹⁾,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에는 거대한 유동자금이, 중간 소득층에는 거대한 가계부채가, 저소득층은 부채조차 질 수 없는 신용불량이 존재함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²⁾.

저출산은 가족구조와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가계 불안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저출산은 이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거대한 베이비붐 인구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현상과 겹쳐져 노인부양비를 급속히 증가시키게 된다. 21세기 전반의 이러한 인구학적 변동은 이미 기정사실화하였다.

고령화는 양극화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다.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무소득자이고 이들의 증가는 시장적 요인의 양극화에 더해 인구학적 요인의 양극화를 더하게 된다.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강력한 대책이 없는 한, 고령화와 착종되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지극히 우려할 만한 것이다. 본격적인 고령화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준비의 시간도 극히 짧다.

<그림 1> 인구구조 변동의 추세(1960-2050)



한국 경제는 이미 거의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식량, 자원, 에너지의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 이미 두 차례 한국경제를 강타한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FTA는 장점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더욱 진행될

1) 2007년 소득지니계수는 0.316이었으나 자산지니계수는 0.650이었다.

2) 작년말 가계부채는 913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화는 일상적으로는 저강도의 경제구조 조정을 초래할 것이고 특정시기에는 고강도의 경제적 타격을 반복할 것이다. 이 역시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가 없는 한 양극화를 진행시키고, 가정경제의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양극화와 고령화는 왜 문제인가?

빈곤이 사회적 인권의 문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정당인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의 경우, 이는 기본적인 인식에 해당하므로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빈곤이 단순한 인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넓어지고 있는 빈곤층, 깊어지고 있는 빈곤의 정도, 많아지고 있는 사실상의 실업은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불행하고 불안한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

자신을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³⁾에게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리 없고, 생산성도 창의력도 나오기는 힘들다. 인적 자본이 고령화에 의해 양적으로 줄어들고 양극화로 만들어진 빈곤에 의해 다시 반감된다면 한국 사회의 존립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몇 개의 대기업이나, 몇 명의 천재적인 엘리트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물적 자본,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에 상당히 성공한 나라이다. 21세기 한국에서 경제와 사회의 발목을 잡을 부분은 물적 자본이나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다. 양극화와 고령화로 축소되어 갈 인적 자본의 확충, 그리고 신뢰에 바탕을 둔 대화와 협조의 사회적 자본 확보가 21세기 한국사회 생존의 관건임은 너무 자명하다.

3)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7%로 약 7.7% 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한다.

□ 복지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시장이 적절한 분배기능, 즉 낙수효과를 상실하면 이것을 재건해 주어야 한다.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소득 제공은 소실된 낙수효과를 인위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이다. 물론 시장의 분배기능을 되살리는 다음의 조치와 병행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단이다.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고 고용의 확대가 곧 낙수효과를 복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전소득의 증가와 사회서비스 고용의 확대는 가계의 구매능력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구매력의 부족이 심각한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수요의 확대는 생산을 자극하고 일정한 순환과정을 거쳐 경제를 성장시킨다. 내수경제의 강화로 대외의존도의 상대적 비중을 줄일 수 있어, 경제를 안정시키고 이로써 가계를 보호한다.

국민들의 능력을 키워 인적자본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소득보장⁴⁾, 출산력을 높일 보육과 육아지원, 건강을 향상시킬 보건의료, 창의적 교육, 광범위한 직업능력 훈련 등이 필요하다.

실업, 노후, 및 지속적 빈곤에 대한 소득보장(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직업능력훈련(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는 고용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한다. 노동의 이동성이 적절히 증가하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실질적인 인적자본 확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대책이다.

위와 같은 대책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소속감, 상호 신뢰를 키워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촉진된다. 또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노동조합의 전투성을 완화하여 사회를 안정시킨다. 이 역시 사회적 자본 축적의 필수조건이다.

4) 가계 자체가 불안정한 계층이 어떻게 스스로 인적 자본을 키울 수 있겠는가? 기본적인 삶의 안정은 전제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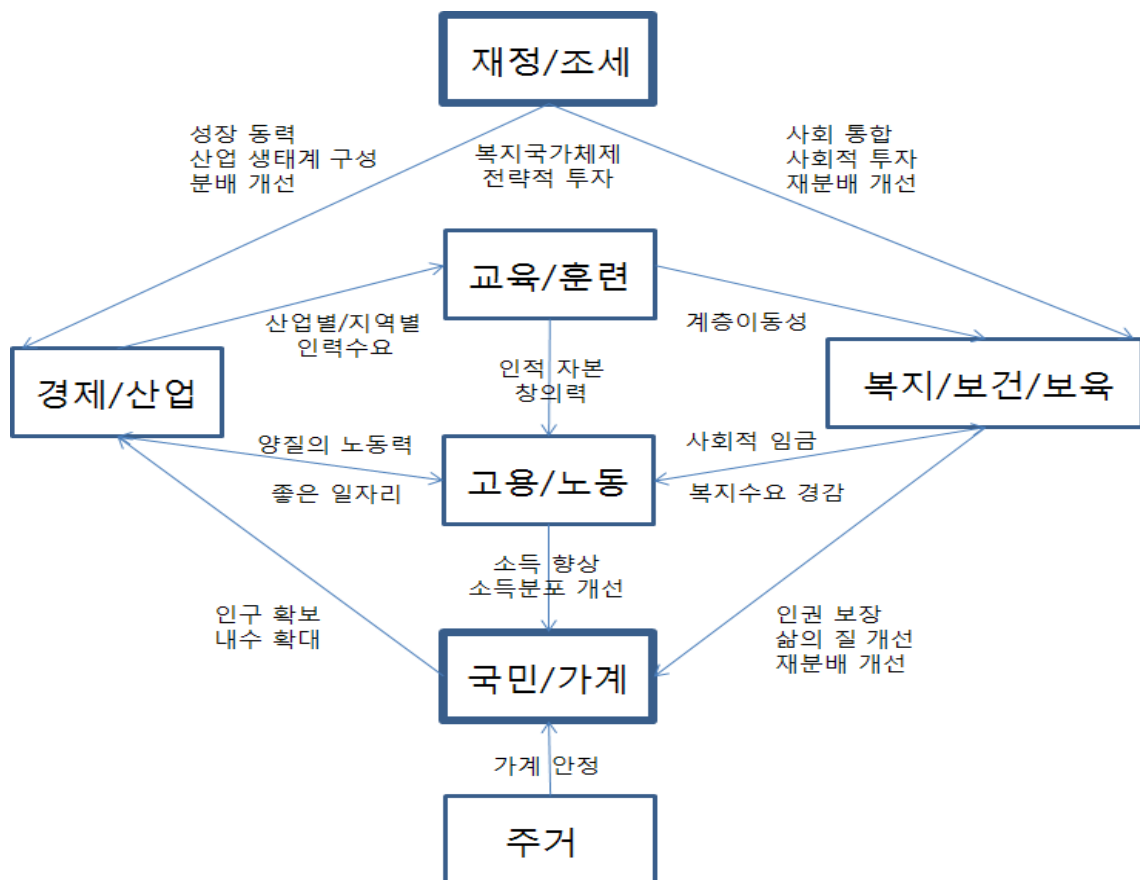
III.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가?

□ 새로운 사회 건설의 종합적인 구상 - 그 안에서의 복지 구상

복지의 구상은 복지 자체만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산업-교육-노동-복지-주거』 등의 일련의 정책방향들이 종합적으로 구상되고 그 위에 복지가 위치를 잡아야 한다. 정부와 재정, 조세의 역할은 이를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의 방식은 경제의 민주화와 국민들의 필요에 맞는 복지정책을 공정한 노동시장정책 및 계층이동을 촉진하는 교육정책과 결합하여, 국민 개개인과 가정경제를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이미 형성된 불평등 구조 또한 해소하는 것이다.

<그림 2> 경제와 복지의 순환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협조하는 기업생태계의 구성과 기업들이 전국의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는 것은 시장소득의 공정한 분배에 기초가 된다. 대-중-소 기업간, 자본-노동간 새로운 관계설정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장은 분배정의의 추구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핵심에 또는 중앙의 연결 부분에 ‘일자리(고용과 노동)’가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이, 더 좋은 일자리와 격차가 줄어든 일자리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근로소득을 올려 가계가 안정되고 분배가 개선되어야 한다.

가계 소득의 일정 부분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도록 - 특히, 지속적·반복적 빈곤, 실업, 노후의 시기에 - 사회보장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돌봄 노동이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사회화되어 개별 가족의 돌봄 노동으로 여성이 비경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서비스 수급자 자신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종합적 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 비용효율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여러 분야 중, 경제·산업과 교육의 변화 속도는 상당히 느릴 것이다. 비교적 가까운 해결책이 고용과 복지의 제도 개혁이며 이들이 국정 전반의 개혁에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복지 정책의 강도

복지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 당면한 사회문제의 크기, 심각성, 속도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이미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기’의 국면에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그 정당의 정책은 실현가능성도 재원조달 가능성도 떨어지고, ‘장미빛 약속’,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되물자면, 저강도의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회문제는 해결될 전망이 없고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그렇다면 그 ‘실현가능하다는’ 정책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강도 높은 정책이란 설익거나, 조급하거나, 과격한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강도가 높을수록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순을 정확히 잡아서 추진해야 한다. 강도를 높이 하더라도 실제 실현되는 정책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 복지의 기반 - 사회 인프라

복지는 잘 작동하는 인프라 위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급여확대, 노인요양보험의 제공, 보육의 확대 등에서 경험했다시피 인프라의 공공성 부족은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를 불가능하게 한다.

교육, 보육, 보건의료, 사회복지의 각 분야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시설은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적절한 지역배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만능주의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공성을 갖춘 민간부분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 사회인프라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적 소유의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바, 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시장을 통해 구매되는 민간복지와도 적절한 균형을 맞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복지비용 팽창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간 공급자에게는 사회적 규율을 적용하고 민간공급자의 시장합리적 행위를 유도해야 한다.

인프라의 확대는 고용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향후 한국의 고용에서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분야이다.

□ 복지의 기반 - 조세와 재정

모든 복지국가는 조세국가이다.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복지정책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정당성이 훼손된다.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재원이 충분하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한꺼번에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정책들은 상당한 준비기간과 국민적 동의, 관계집단의 합의 등을 도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재정의 소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재정의 수급 계획은 이러한 기술적 준비기간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재정과 조세의 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조세개혁을 단순히 복지재정의 조달로만 보는 것은 편협한 사고이다. 조세 제도는 그 자체가 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또한 각종 정부 정책을 유도하는 유인-역유인 기제로서의 의미도 크다.

현재 고소득층에 과다하게 쏠려 있는 부와 저소득층의 빈곤이 한국사회의 위험 요인이 되어 있다면 재분배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재정의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의 편중을 교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폭탄'이 아니다. 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부유층도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통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조세 문제는 복지와 지나치게 강한 연결을 가지게 되었다. 조세 제도 개편은 복지재정 조달의 수단만이 아니라 조세가 가지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IV. 복지의 장애요인

□ 복지 자원

복지 확충을 말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재원마련에 대한 반문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차기정부에서 국정운영을 해보면 복지 확충의 주된 장애요인은 그게 아닐 것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차기정부 단계에서 가장 크게 당면할 장애요인은 부처간 이권 조정, 이익집단과의 협상, 새로운 복지제도의 준비를 위한 기술적 난점, 일부 분야에서는 대국민 설득 등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재원마련이 관건적이며 한국이 복지국가로 본격적인 진입을 하는 데는 증세가 필수적이다. 아마도 증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은 - 차기정부가 복지를 열심히 확충한다면 - 차차기 정부 초기 정도일 것이다. 차기정부에서는 부분적 세율조정, 재정개혁, 복지제도의 합리화 등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 이익단체들의 저항

복지 분야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있다. 보육과 사회복지에서 시설장, 노동과 고용에서 재계와 노동조합, 교육에서 학교장과 학교재단, 보건의료에서 의료전문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업계, 고등교육에서 교수,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서 공무원과 군인 등 얼른 눈에 뜨지 않는 집단도 있다. 때로는 장애인, 고령자 등 당사자들이 저항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저항이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니다. 정부의 누적된 정책 실패로 인해 이들이 실제로 고통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부처간 갈등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사실상 관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관료들은 자기부처 뿐 아니라, 청와대(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여당(국회의원 및 정책전문위원 등), 각종 산하기관(기관장, 이사, 감사 등)을 순환하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부처와 사회부처 사이에는 상당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부처들은 예산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타 부처의 정책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부처들은 반복지적 지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이런 영향은 차기정부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반복지의 논리

이제 아무도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복지 공포증’을 유발하여 에둘러 복지를 방해한다.

반복지 논리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증세론, 세금폭탄론, 서민부담론이다. 최악의 형태는 여기다 더해서 복지비용을 부풀려 잡는 것이다. 어느 정도가 세금 ‘폭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경우라도 폭탄이 될 만한 증세는 없을 것이다. 폭탄이라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인데 얼마나 증세를 하면 부유층이 노숙자가 되겠는가? 아무리 강한 누진성을 가진 조세라도 소득계층을 역전시키는 조세는 없다. 서민이라면 ‘중산층의 하층’ 이하를 의미할 것인데 그런 계층은 국가에 대한 부담보다는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크다.

둘째로 포퓰리즘, 복지망국론, 복지병론, 영국병론이다. 복지하면 경제가 쇠약해져서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 단계 한국에서 복지의 강화는 경제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발전시킨다. 복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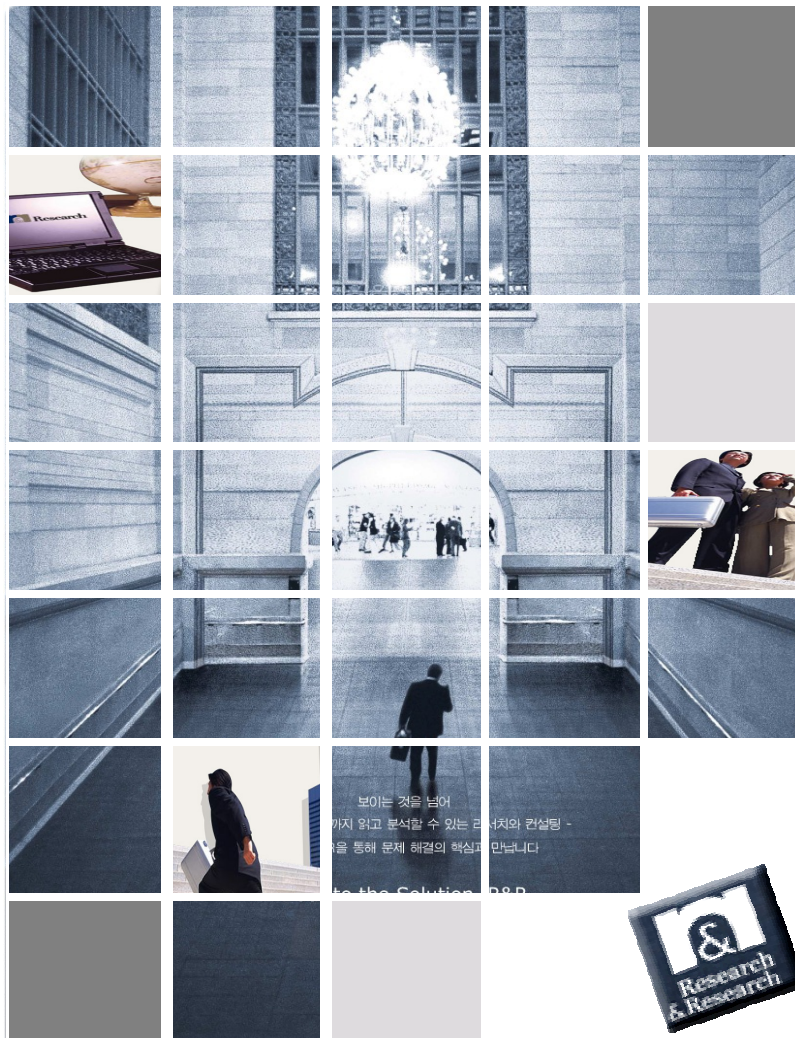
V. 맺는 말

지난 2~3년간 복지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은 비약적으로 커졌고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복지는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느 정당이 차기 집권을 하더라도 복지문제가 국정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야 주요 정당이 모두 복지를 공약으로 약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양당간의 견해 차이는 작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다.

정당간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복지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분간은 반복지의 논리들이 기승을 부리더라도 복지는 결국 한국이 선택해야 할 불가결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 문제에 대한 토론이 좀 더 다양하게 전개되고, 여러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토론에 귀를 기울여 기왕의 정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국민들을 향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정책 공약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2012. 5

1. 조사 설계 :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전국 16개 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방법	➤ CATI (<u>C</u>omputer <u>A</u>ssisted <u>T</u>elephone <u>I</u>nterview) ➤ 유선전화를 이용한 RDD (Random Digital Dialing) 방식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RDD 방식 혼용
	표본 크기 표본 오차	➤ 1,000 명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표집 방법	➤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2012년 5월 24일(목) ~ 5월 25일(금)

2. 조사 설계 :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		1,000	100.0
성별	남 성	495	49.5
	여 성	505	50.5
연령별	19~29세	185	18.5
	30 대	206	20.6
	40 대	219	21.9
	50 대	187	18.7
	60 대 이상	203	20.3
성연령별	남성 20대	97	9.7
	남성 30대	104	10.4
	남성 40대	112	11.2
	남성 50대	94	9.4
	남성 60대 이상	88	8.8
	여성 20대	88	8.8
	여성 30대	102	10.2
	여성 40대	107	10.7
	여성 50대	93	9.3
	여성 60대 이상	115	11.5
거주 지역별	서울	209	20.9
	인천/경기	286	28.6
	대전/충청	101	10.1
	광주/전라	101	10.1
	대구/경북	105	10.5
	부산/울산/경남	158	15.8
	강원/제주	40	4.0

구 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		1,000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150	15.0
	고졸	303	30.3
	대재 이상	537	53.7
	무응답	10	1.0
직업별	자영업/사업주	202	20.2
	정규직근로자	289	28.9
	비정규직근로자	86	8.6
	무급가족종사자	243	24.3
	무 직 / 실업	178	17.8
소득별	무응답	3	0.3
	200만원 이하	260	26.0
	201~300만원	212	21.2
	301~400만원	154	15.4
	401~500만원	128	12.8
	501만원 이상	71	7.1
	무응답	99	9.9
이념 성향별	보수	325	32.5
	진보	254	25.4
	중도	335	33.5
	모름/무응답	86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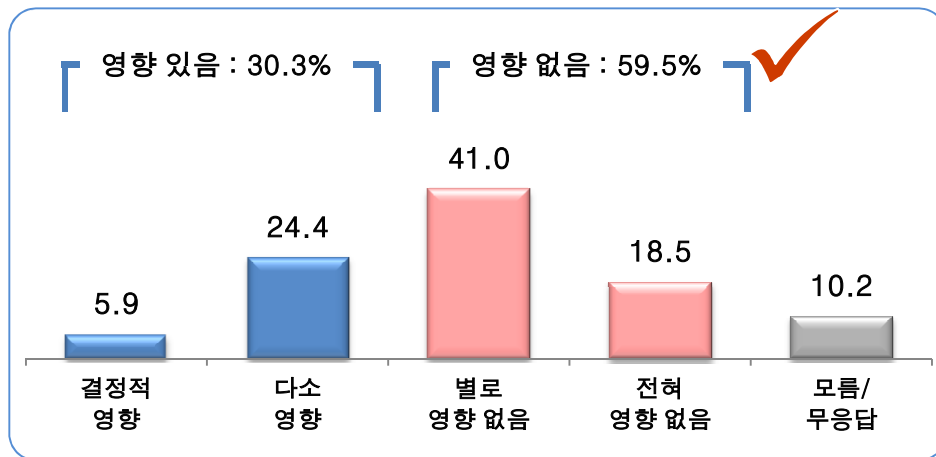
3. 총선 복지 공약 평가

3-1. 총선의 각 정당 복지공약의 영향

- 총선에서 각 정당 복지공약의 영향에 대해서, '영향 있었음'이 30.3%, '영향 없었음'이 59.5%로 영향이 적었던 편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특히 복지공약의 영향력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충청권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영향이 있었다는 의견이 다소 높음. 직업별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고용 노동자들에게 특히 영향이 적었음.

총선의 각 정당 복지공약의 영향

(단위 : %, N=1,000)



응답자 특성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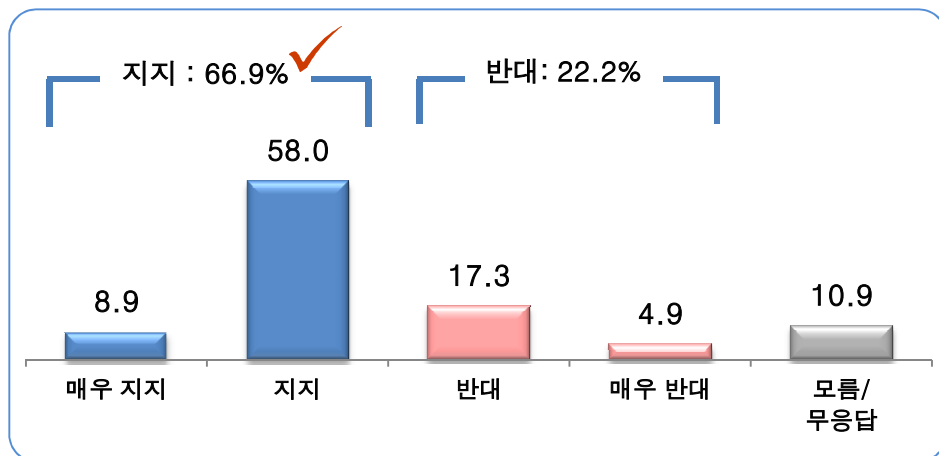
		사례수	영향 있었음	영향 없었음	무응답
전 체		(1000)	30.3	59.5	10.2
성별	남 성	(495)	30.8	61.7	7.6
	여 성	(505)	29.9	57.5	12.6
연령별	19 ~ 29세	(185)	33.9	61.3	4.7
	30 대	(206)	25.9	67.2	6.8
	40 대	(219)	32.3	58.2	9.5
	50 대	(187)	31.0	58.5	10.5
	60 대 이상	(203)	28.6	52.6	18.8
지역별	서울	(209)	32.2	58.3	9.5
	인천/경기	(286)	29	63.1	7.9
	대전/충청	(101)	34.2	54.9	10.9
	광주/전라	(101)	28.9	61.6	9.5
	대구/경북	(105)	36.0	51.8	12.2
	부산/울산/경남	(158)	24.4	62.9	12.8
	강원/제주	(40)	31.9	54.4	13.8
직업별	자영업/사업주	(202)	30.2	58.9	11
	정규직근로자	(289)	30.9	64.3	4.8
	비정규직근로자	(86)	23.2	68.9	7.9
	무급가족종사자	(243)	30.8	56.3	13
	무직/실업	(178)	32.9	52.4	14.6
	무응답	(3)	0.0	74.1	25.9

3. 총선 복지 공약 평가

3-2. 새누리당 총선 복지 공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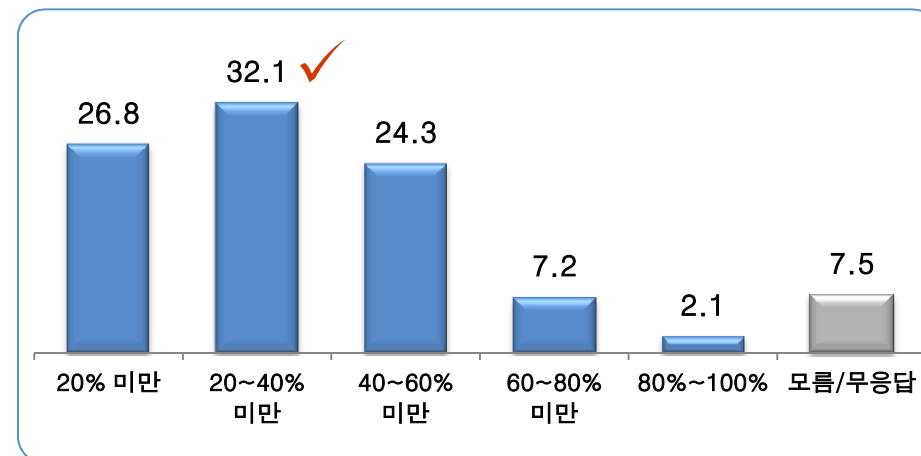
-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 정책 공약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66.9%, 반대한다는 응답이 22.2%로 지지의견이 더 많음
- 복지 공약 실현가능성은 20% 미만인 26.8%, 20~40% 미만인 32.1%로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이 많은 가운데, 평균적인 실현 가능성은 33.9%로 나타남. 주)

복지 공약 평가



복지 공약 실현가능성

(단위 : %, N=1,000 평균 33.9% 실현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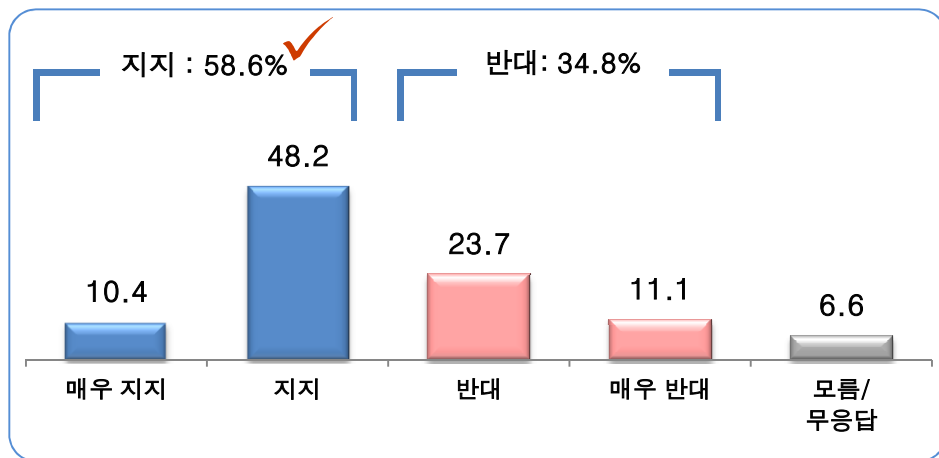
주) 20% 미만은 평균 10%, 20~40% 미만 응답은 평균 30%로 ... 80~100%는 90%로 환산하여 평균을 산출함.

3. 총선 복지 공약 평가

3-3. 민주통합당 총선 복지 공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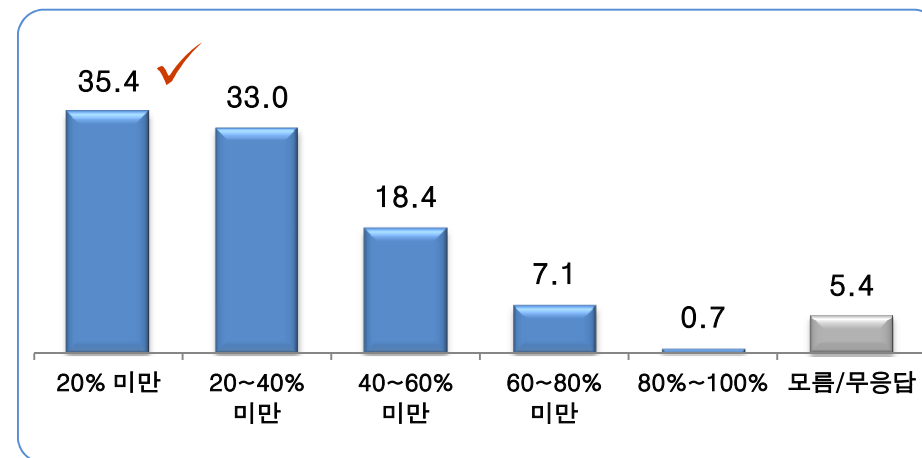
-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공약의 경우 지지한다는 의견이 58.6%로, 반대한다는 의견 34.8%보다 더 높았지만, 새누리당(66.9%)에 비해서 지지 의견이 8.3%p 가량 낮음.
- 복지 공약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40% 미만 의견이 많아 부정적임.
- 평균 실현가능성은 29.9%로 나타나 새누리당(33.9%)보다 4.0%p 가량 더 낮음

복지 공약 평가



복지 공약 실현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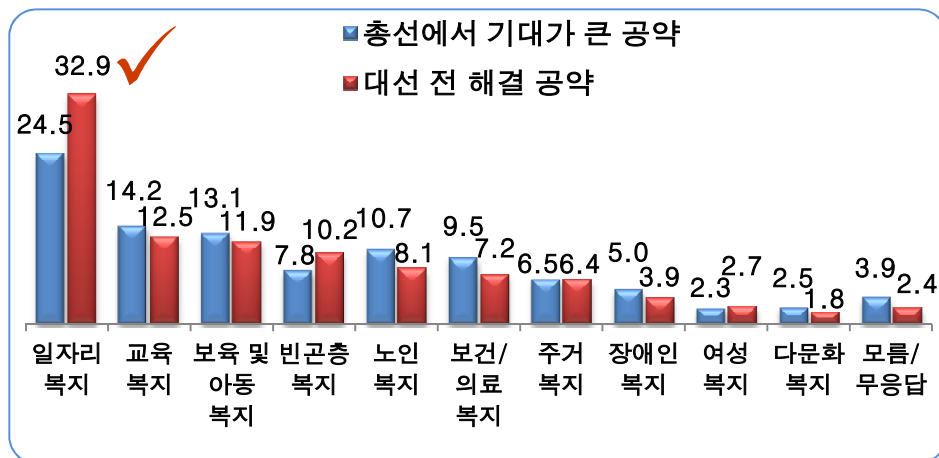
(단위 : %, N=1,000 평균 29.9% 실현가능성)



4. 복지공약 실천 및 대선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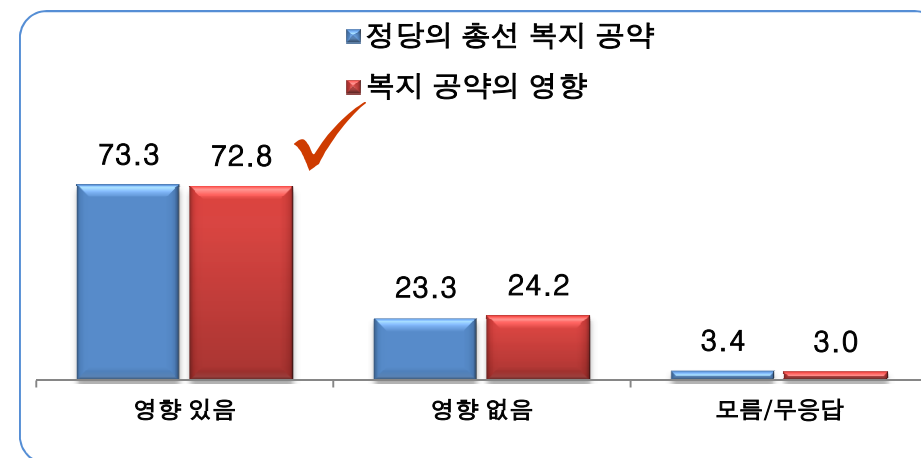
- 총선 복지공약 중 기대가 큰 복지공약과 대선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 공약 모두 일자리 복지 정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1/3 가량의 국민이 대선 이전에 일자리 복지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정당의 총선 복지공약 실천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73.3%의 국민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함.
- 또한 복지공약이 대선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72.8%의 국민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총선에서 기대가 큰 공약 및 대선 전 해결 공약



정당의 총선 복지공약 실천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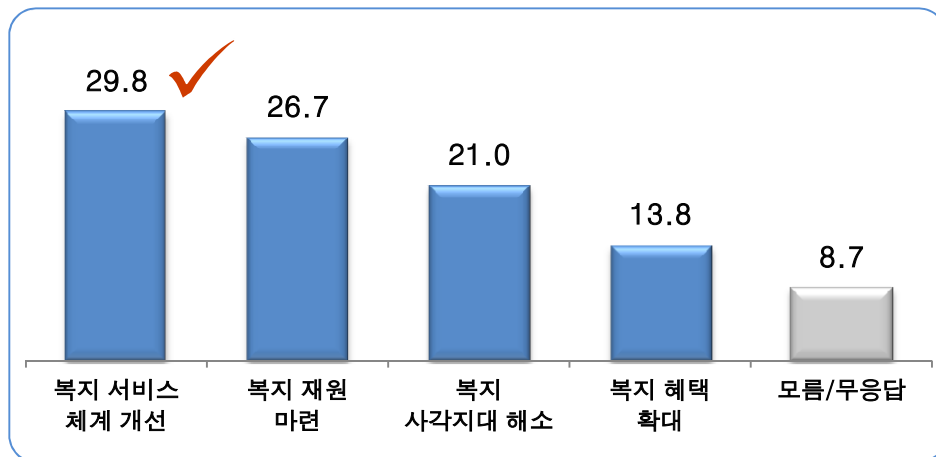
(단위 : %, N=1,000)



5.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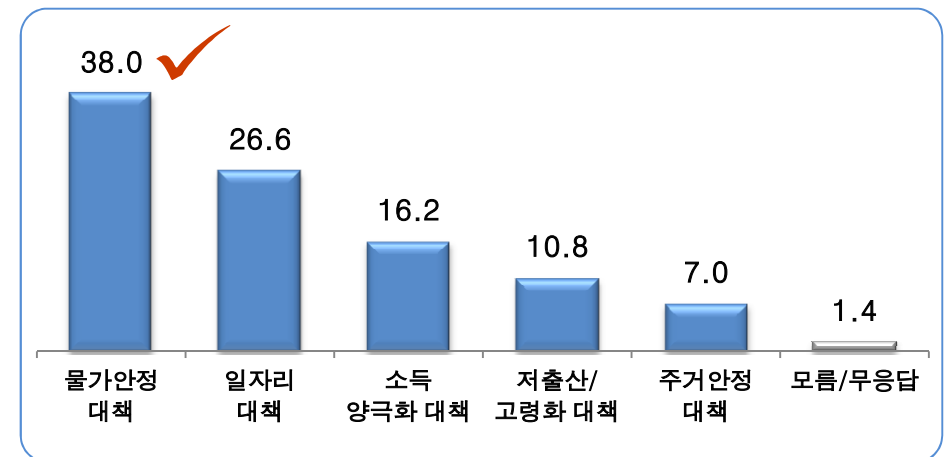
- 현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복지정책 과제로는 ‘복지 서비스체계 개선’ 29.8%, ‘복지 자원 마련’ 2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21.0%, ‘복지 혜택 확대’ 13.8%의 순임.
-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 과제로는 ‘물가안정 대책’이 38.0%로 가장 높고, ‘일자리 대책’이 26.6%로 그 다음으로 나타나, 주로 서민 생계와 직접 연관된 물가 및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임기 중 해결해야 할 복지정책 과제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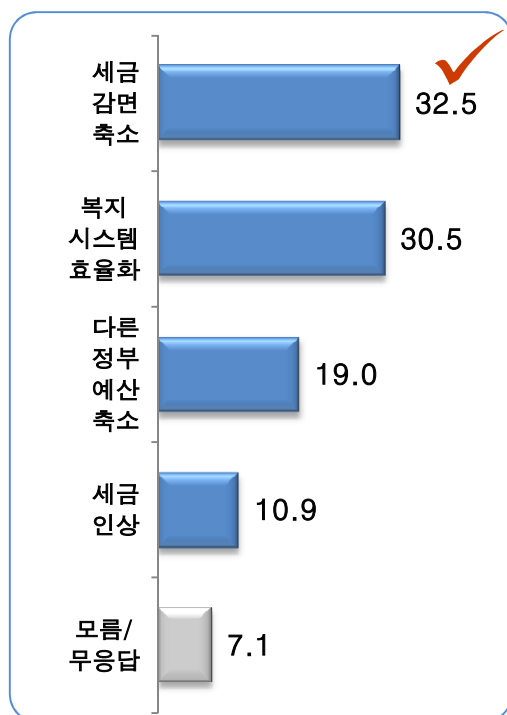
(단위 : %,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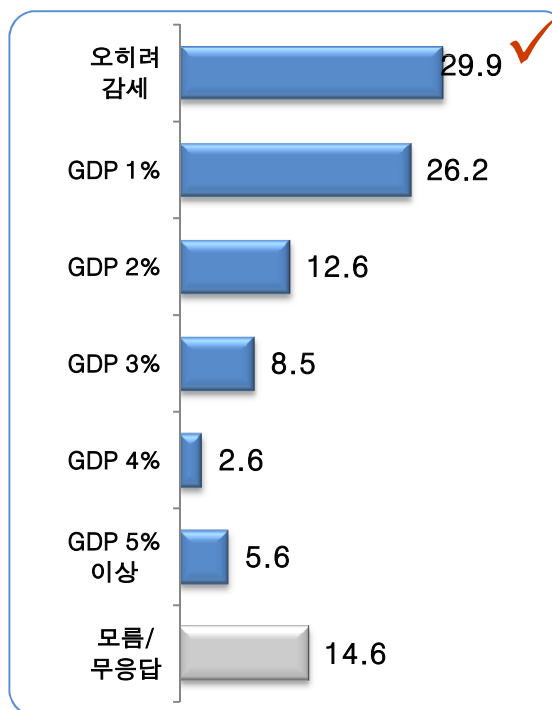
6. 복지공약 실현 조건

-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세금감면 축소'라는 응답이 32.5%, '복지시스템 효율화'라는 응답이 30.5%로 두 가지 방안이 주로 나타남.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 수준의 경우, '오히려 감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29.9%, 'GDP의 1%'라는 응답이 26.2%로, 감세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증세를 원함.
-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 분야에 대해, '법인소득세'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산세'가 17.2%로 그 다음임.

자원조달 방안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세금



7. 향후 정부의 성장/분배 정책 비중

- 향후 정부의 성장·분배 정책의 적절한 비중에 대해서, ‘성장 정책 50% 분배 정책 50%’라는 응답이 52.7%로, 두 정책의 조화 의견이 우세함.
- 그리고 대체로 분배정책 중심 의견(15.2%)보다는 성장정책 중심 의견(22.2%)이 7.0%p 가량 좀 더 높음.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의 적절한 비중

(단위 : %, N=1,000)

